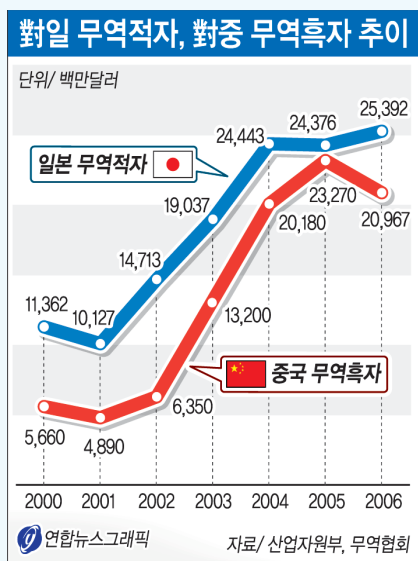


對日 적자 21% ↑ 對中 흑자 17% ↓

1~4월 무역수지 '샌드위치 코리아' 심화
엔저·中 투자증가·국내기업 현지화 영향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는 갈수록 확대되고 중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한·중·일 동북아시아 3국의 무역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는 밀리고 중국에는 추격당하는 샌드위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1일 산업자원부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89억8천100만달러였고 수입은 184억3천7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100억5천6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대일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의 1월부터 4월까지 적자(83억4천600만달러)보다 20.5% 늘어난 것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대일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크다. 일본에 대한 무역

적자는 2000년 113억6천200만달러, 2001년 101억2천700만달러, 2002년 147억1천300만달러, 2003년 190억3천700만달러, 2004년 244억4천300만달러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에는 243억7천600만달러로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대일 수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1.1% 늘어난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수입은 10.8%나 증가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중국에 대한 수출은 247억9천200만달러였고 수입은 195억2천500만달러로 무역흑자는 52억6천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 기간 중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지난해 동기보다 16.8% 줄었다. 대중 무역흑자는 2000년 56억6천만달러에서 2001년 48억9천만달러로 떨어진



이후 2002년 63억5천만달러, 2003년 132억달러, 2004년 201억8천만달러, 2005년 232억7천만달러 등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209억6천700만달러로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올해도 같은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대일 무역적자가 늘고 있는 것은 기술·

부품·소재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올해 들어 엔화 약세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제품의 엔화 표시 가격은 올라가 수출은 저조하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 오정규 무역투자진흥관은 "대일 적자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부품·소재분야 적자는 개선조치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3년간 달러대비 엔화 값 자체가 40%나 절하되면서 각종 첨단 자부재와 소비재의 수입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달러박스' 역할을 하던 대중 무역흑자의 축소는 중국이 철강과 석유화학 등 기초 소재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고성장세를 거듭하는 데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현지화까지 더해지면서 국내산 제품을 중국에 내다 팔 소지가 줄어들어 원인으로 분석된다.
'무엇 샌드위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분야의 기술력을 높이는 노력과 더불어 엔화 약세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상장사 1분기 순이익 '희비' 유가증권 10% 늘고 코스닥은 26% 급감

올해 1분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은 순이익이 10% 이상 늘어난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은 25%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조업체들은 간신히 순이익분기점을 맞췄으나 금융업은 60% 가까이 순이익이 급증하는 등 상장사들의 실적에 업종별로 엇갈렸다.
21일 증권선물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546

개사의 '2007년 1분기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장사 전체 매출액은 174조6천91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2%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3조4천876억원으로 10.1%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매출액이 163조210억원으로 8.2% 늘었으나 순이익은 10조5천88억원으로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금융업종은 매출액이 11조6천706억원으로 8.6% 늘어났으나 순이익은 2조9천788

구분	06년1분기	07년1분기	증감	증감률
매출액	1,614,620	1,746,916	132,296	8.19
영업이익	126,341	144,488	18,107	14.33
법인세비·동차권전 계속사업이익	158,599	167,563	8,964	5.65
분기순이익	122,536	134,876	12,340	10.07
매출액영업이익률	7.82	8.27	0.44	-
매출액순이익률	7.59	7.72	0.13	-
매출액	158,602	168,456	9,854	6.2
영업이익	8,896	8,107	-788	-8.9
법인세비·동차권전 계속사업이익	10,108	8,108	-1,928	-19.1
분기순이익	8,058	6,004	-2,054	-25.5
매출액영업이익률	5.6	4.8	-0.8	-
매출액순이익률	5.1	3.6	-1.5	-

억원으로 무려 59.1% 급증했다.
거래소는 제조업의 경우 환율, 유가 등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LCD부분의 실적부진이 전체 실적에 영향을 미쳤으나 금융업은 대출금리 인상과 투자자산평가이익 증가, 수수료 수입 상승 등으로 실적 호조세를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유가증권시장 조사대상 기업 중 흑자기업은 439개사로 전체의 80.4%를 기록, 지난해 동기의 81.3%보다 낮아졌다.
10대그룹의 1.4분기 매출액은 총 82조4천626억원으로 6.2% 늘었으나 순이익은 4조8천639억원으로 12.1% 줄었다.
코스닥시장은 12월 결산법인 853개사의 전체 매출액은 16조8천456억원으로 6.2%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6천4억원으로 25.5% 급감했다.
코스닥기업들은 대부분의 업종에 걸친 외형 확대노력으로 매출이 늘었음에도 내수부진, 경쟁심화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코스닥시장 비금융기업의 부채비율은 81.2%로 지난해말 대비 2.4%포인트 높아지며 80%대로 올라섰다.
조사대상 기업 중 흑자기업은 556개사로 65.1%를 기록, 지난해 동기의 70.2%에서 상당폭 낮아졌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고객권에 인물초상 넣는 이유?

위·변조 식별 가장 쉬워
유로화 인물 안써 '곤혹'

2009년 발행될 고객권의 도안선정 작업에 본격화하면서 각계 각층에서 특정 위인을 인물초상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이해집단 간 마찰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인물초상 이외의 대안으로는 독도와 백두산, 훈민정음, 태극문양, 2002년 월드컵 당시 시청앞 거리응원 모습 등을 답자는 주장이 한국은행 홈페이지 게시 판이나 신문의 독자투고 등에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안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책임을 맡은 한국은행은 "인물초상 이외에 다른 대안은 채택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은이 인물초상을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변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자연소재나 건축물 등에 비해 인물초상은 위·변조 여부를 가려내기 훨씬 쉽기 때문이다. 예컨대 독도를 고객권 소재로 채택할 경우 독도의 생김새를 정확히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는 일반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폐범이 비슷하게 그려낸다고 하더라도 구별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인물초상은 약간의 달리 그려도 인물 자체가 풍기는 이미지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위·변조 여부를 쉽게 드러낸다.
지폐에 인물초안을 채택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유로화다. 유로를 사용하는 12개 국가의 이해관계 때문에 특정 국가 출신의 위인을 인물초상으로 채택하는데 합의하지 못해 건축물을 소재로 쓸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유로화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려낸 위폐범의 손쉬운 공략 대상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외이사제도 손본다

겸직 논란·독립성·역할 문제 잇따라

금감원, 도입 10년만에

금감원, 도입 10년만에 사외이사 제도 도입 10년 만에 사외이사 제도에 손을 댄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증권위원회와 함께 사외이사 실태점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지난 주 첫 회의를 갖고 우선 1천400여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사외이사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뒤 사외이사 제도를 고쳐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도입된지 10년만에 처음으로 사외이사 제도에 칼을 대기로 한 것은 청와대 측의 지시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동전화 휴면요금 300억원 환급

온라인 시스템 구축

이동전화 요금을 실수로 이중으로 냈거나 할인받은 금액, 보증금 등을 찾아가지 않아 300억원에 가까운 휴면요금 발생했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 같은 휴면요금을 인터넷으로 조회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구축, 운영에 들어갔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갑)는 이동전화 요금 환급액 발생 여부에 대한 정보와 환급 신청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동전화 미 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신위 집계결과, 이동전화 사용이 시작된 1996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609만 건의 이동전화 번호에서 298억원의 미 환급액이 발생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나 통신위(www.kcc.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미 환급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 계좌로 환급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에서 최대 15일 안에 환급받을 수 있다.
통신위는 일반적으로 이동전화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시점까지의 요금을 납부하고 해지하고 있으나 사후정산 결과 할인조건에 따른 과납요금, 이종납부, 보증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미 환급요금 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본금 5억 안되면 부동산개발업 등록 불가

자본금 규모가 5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이 안돼 연면적 2천㎡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업자(디벨로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최근 공포돼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법은 연면적 2천㎡ 이상(또는 연간 5천㎡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의 건축사업을 등록사업자만 하도록 하고 있다. 또 3천㎡ 이상(또는 연간 1만㎡ 이상)의 토지 개발사업도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했다.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 확보해야 등록 가능하다.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서 연면적 2천㎡ 이상의 건축 사업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연합뉴스

산업은행 간부 거액 돈 빌린 뒤 잠적 '파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한 간부가 지인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잠적하는 일이 발생,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성 출장' 파문과 '낙하산 인사' 논란, 지나치게 높은 연봉 등으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K(53) 지점장은 2005년경부터 고등학교 및 대학동문, 친지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끌어들이던 개인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다가 지난해 뒤 자기 은행에 사표를 내고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끊었다.
피해자들은 자기 혐의로 지난해 말 그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으며 산은도 K씨를 보직해입힌 뒤 곧바로 자체 특감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사회서비스 일자리

13만 5천명에 제공

올들어 지난 4월까지 13만5천명에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재정집행 실적은 70조1천억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74조3천억원의 94.3%였다. 분야별로 보면 예산은 계획대비 93.6%, 기금은 84.0%, 공기업은 105.2%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사업 성격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은 4월말 현재 13조9천억원을 집행해 계획대비 105.3%를 달성했다.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는 1조3천억원을 투입해 38만명을 지원했으며 계획대비 달성률은 예산 122.1%, 인원 106.4%였다.
이중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을 통한 고용 인원은 13만5천명, 집행된 예산은 3천965억원으로 각각 상반기 계획의 79.2%, 54.8%를 달성했다.
사회서비스업의 경우 5월21일 현재 39개 사업중 34개 사업이 시행중이며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자원봉사 도우미 등 5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6~7월중 시행된다고 기획처는 밝혔다.
특히 지자체들은 자체 재원으로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거나 지방비를 별도로 확보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코스피·기름값 공공 행진
중국의 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지수(사진 위)는 21일 1천628.20을 기록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고유가 탓에 걸려 14주째 오르고 있는 휘발유 값(아래)도 1ℓ당 1천698원을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